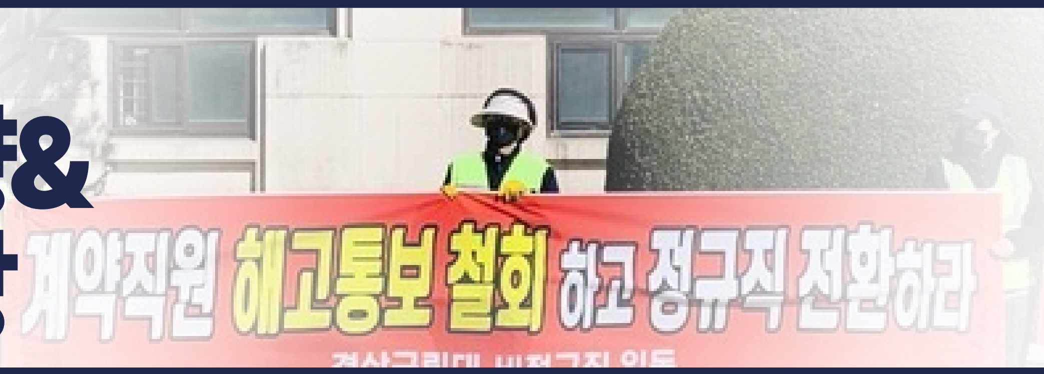
동향&
전망



다시 불거진 기간제법 논쟁

2024.12.30 1호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정책해설지 47호 | 2026.4.13 | ch.kmwu.kr

기간제법 악용, 현실적 해결방법 찾자?

기간제법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이 이번 정부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에 대한 이견이 고용 유연화와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둘러싼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산별조직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기간제법' 개정을 시사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 기간제법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기업들이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현실적'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현행 법률의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기간제법)
>
>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중략)
>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 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2월 21일 만들어져,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애초 취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이 넘지 않는 계약(가령 1년 11개월)을 하고, 계약종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은 재계약 거부를 '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을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계약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기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사용자들은 초단기간(1개월,3개월 등) 계약직 노동자들을 늘리고, 짧은 재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무기계약직처럼 사용하는 꼼수도 부렸습니다.

근본적 해결은 비정규직 사용 제한부터!

우리 현장에서도 최근 몇 년사이 정규직이 퇴직한 자리에 계약직을 채용하고 재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정규직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점점 현장에서 정규직 공정에 계약직 투입을 당연시 여기기도 합니다. 동시에 계약직 노동자는 같은 노동을 하며 임금, 복지 등에 차별을 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느 회사는 계약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노동자를 내보낸 후, 수 개월(또는 몇 년) 지난 후 다시 채용하여 전체(계속근로)근무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간제 기간연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2009년 7월 기점으로 법 시행후 2년이 도래한 기간제 노동자의 '100만 해고대란설'을 살포하며 기간연장 개정을 추진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4년 기간제'를 추진했으나 역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로 좌초되었습니다.

즉, 사용기간 연장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또 다른 꼼수를 확대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현 기간제법도 '2년 뒤 해고 법'으로 전락한 만큼 기간연장이 아니라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현장에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 만큼 기간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간을 2년에서 4~5년으로 늘린다고 노동자가 고용안정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 고용불안만 '연장'되는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청와대는 올해 2월 29일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하는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TF'를 출범하고 <기간제 2년 제한 완화>를 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간제법 손질을 시사하면서, 올해안에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지 주목됩니다.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정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노동, 그리고 더 많은 고용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주장하는 자본간의 뜨거운 논쟁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약칭 경사노위)' 에 복귀하여 노동의제를 논의하자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공(ball)을 민주노총에게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기간제법 이슈 등이 '사회적 대화'에서 진정성있게 조정,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 노사정 대화 등 총노동의 교섭과 투쟁전략을 내부 토론을 통해 수립해야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